

사찰 물의 정보수집 국정원은 축소...경찰은?

서훈 국정원장 “국내 정보관 각종 기관 출입 전면 폐지”

경찰 정보 독점 우려...광주경찰 “인권 중심 치안 활동”

우리나라 정보수집 기관의 양대 축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이다. 국정원은 ‘안보’를, 경찰은 ‘치안’을 목적으로 주요 기관과 인물 동향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대선 댓글 조작,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안보를 명분 삼아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 사찰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금지를 내걸었고, 국정원도 스스로 개혁위원회를 꾸려 정보 수집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훈 신임 국가정보원장도 “국내 정보관의 각종 기관 출입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여전히 경찰법에 따라 치안 정보 수집을 위해 각 기관과 기업체, 시민·사회단체 등을 수시로 출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찰이 국내 정보수집 권한을 독점하게 돼 ‘정보 왜곡’, ‘영향력 강화’ 등 또 다른 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경찰서 정보과 직원들은 주요 공공서 등을 출입처로 정해놓고 정보수집을 위해 기관장과 직원을 접촉하는 일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광주 경찰을 비롯한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부 기관에선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수사 활동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광주의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수사권을 가진 정보관이 방문하면 혹시라도 잘못 보일까봐 부담감이 있다”면서 “선거직인 자치단체장들은 이들의 말 한마디에 진땀을 빼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찰청은 현재 인권강화 등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치안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

은 경찰법에 따라 정보과 또는 정보보안과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정보관은 지방청과 5개 경찰서를 합쳐 모두 1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정보과의 주요 업무는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 ‘치안정보의 종합·분석 및 조정’, ‘정책정보의 수집·종합 및 분석’,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집회신고접수’ 등으로, 내·외근적으로 나뉜다.

외근직은 직원마다 맡은 지역과 출입처가 있으며, 구청이나 교육청, 사회단체, 문화기관, 기업 등을 각각 전담하고 있다. 외근직 직원이 치중하는 업무는 ‘집회 관련’

이지만, 범죄 정보, 주민 집단 민원 청취,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의 업무 관련 정보, 공직자 비리 첩보수집 등도 중요 업무다. 이들이 수집한 정보는 수시로 상부기관에 보고된다.

이들은 특히 경찰청 본청에서 특정사안과 관련해 정보수집 명령을 내릴 경우 전국 50개 경찰서별로 정보를 취합·분석한 뒤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일선 경찰서 정보과는 상부에서 내려오는 특별 요구 첩보(SRI·Special Required Information)를 처리하기 위한 3~4명 기획정보관을 따로 구성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5·1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과 관련한 정보들이 전국 현안으로 분류돼 상황 발생시 즉시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의 정보수집 시스템이 사안에 따라서는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 민간인에 대한 ‘사찰’로도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경찰의 정보 독점에 따른 ‘정보 왜곡 보고’ 등도 우려되고 있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적법한 범위에서 경찰의 정보수집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인권침해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정보활동만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권영만 광주경찰청 정보과장은 “경찰의 활동은 법에 따른 것으로, 정보 수집 권한 확대를 비치지 않도록 발로 뛰면서 좋은 치안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순회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홍희기자 kimyh@kwangju.co.kr



일 자리를 찾아서

‘2017 남구 취업·창업 박람회’가 20일 광주시 남구 진월동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일자리와 창업 아이템을 제공하기 위해 133개 업체가 참가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사무장 한방병원’ 차려 180억원 챙겨

광주경찰, 한의사·허위 환자 등 130명 적발

광주에서 ‘사무장 한방병원’을 차려 놓고 허위로 환자를 유치해 수백억원의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낸 한의사와 의사와 병원 사무장, 허위 환자 등 13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한방병원 사무장 2명을 구속하고 의사 7명, 사무장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허위로 입원해 요양급여 등을 타낸 혐의 환자 11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주시 북구에서 사무장 한방병원 등 병원 7곳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61억원, 민영보험금 119억원 등 총 180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폐업과 개원을 반복하며 요양급여를 타냈고 환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일부를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무장들은 병원 개설 자금을 사채 등으로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비로 채무를 변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입·퇴원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매일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도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자들은 입원 중 회사에 출근하거나 여행을 다니기도 했으며 허위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1인당 50만~15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한방병원에 의료품을 납품한 제약회사 직원 3명은 사무장으로부터 2000여만 원을 받고 해당 병원에 한의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4~12월 보험범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허위로 받은 요양급여, 보험금은 전액 환수하고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의료기관과 의사는 면허 취소·정지 처분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옛 광주교도소 암매장지 발굴 조사

5·18재단, 법무부에 협조문 발송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지 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5·18기념재단이 옛 광주교도소 조사를 위해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5·18기념재단은 “법무부에 옛 광주교도소 내외의 발굴허가를 요청하는 협조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옛 광주교도소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3공수여단의 주둔지다. 5·18 당시 군의 발표에 의하면 광주 교도소에서는 27명(보안대 자료에는 28명)의 시민들이 사망했다고 했으나 실제로 수습된 시신은 11구에 불과하다.

원래 제3공수여단 부대원이 작성한 시신 암매장 약도가 담긴 메모를 확보한 5·18재단은 약도를 중심으로 교도소 바깥쪽만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최근 5·18 당시 교도소 수감자의 ‘교도소 내 암매장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확인하며 교도소 내부도 조사범위에 포함기로 했다.

5·18재단은 법무부에 오는 29일 이전 현장조사와 10월 16일에서 20일 사이 발굴조사를 하겠다는 협조를 요청했다.

김홍희기자 kimyh@kwangju.co.kr

함평 축산농들 “지자체 부실 행정에 무더기 벌금 억울”

비산면지 사업장 신고 못해

郡, 고발·과태료 처분

자치단체의 부실한 행정 때문에 비산면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못한 축산 농가들이 무더기 벌금 처분을 받게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축산 농가들은 “축산 건축허가 과정에서 군으로부터 비산면지 발생사업장 신고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3월 18

시한 전남도 함평군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비산면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은 축산 농가 등에 대해 고발(12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면지 발생 신고 대상 공사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축조공사, 면적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의 토목공사 등이며 대상 사업장은 사전에 군 환경상하수도과에 비산면지 발생사업 신고를 마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주민들은 “군이 건축 허가 당시 해당 농가에 비산면지 발생사업장 신고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내준 뒤 뒤늦게 행정적으로 운운하면서 관련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2015년 7월 관련법 개정 이후 처벌 조항이 과태료 부과에서 벌금형으로 강화되면서 해당 농민들은 벌금까지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농민들은 “당시 군이 건축물 사용 승인까지 내준 마당에 이제 와서 고발 등 관련

조치를 취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축산 농가들의 건축허가 업무를 대행한 건축설계사는 “비산면지발생 사업장 신고와 관련해 군으로부터 허가 조건 명시 서류를 받지 않아 (비산면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신고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건축허가 당시 개별법에 의해 관련 부서와 협의가 이뤄져 허가가 나오면 사업주에게 허가 조건 등을 통보하고 있다”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비산면지발생 사업장 신고 유·무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잘 처리했어야 했는데 관련 법이 개정되다 보니 이 부분이 잘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알바로 모은 학자금 상환금 뒤늦게 찾아 ‘안도의 한숨’



○...방위산업체 대체복무를 앞둔 대학생이 일용직 노동과 식당 아르바이트로 모은 학자금 상환금이 든 지갑을 주유소에서 잃어버렸다가 뒤늦게 찾아 안도의 한숨.

기름을 넣은 뒤 주유기 위에 현금 450만 원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놓고 갔는데, 뒤이어 주유소를 방문한 김모(30)씨가 지갑을 가져갔다는 것.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보관하고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10여일간 돌려주지 않은 점을 들어 절도 혐의로 김씨를 입건. /김홍희기자 kimyh@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가능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옥최적합 대로변, 병원가능)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핑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병원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330㎡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5백만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양)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제주도 강정마을 (펜션, 타운하우스부지) 바다 한라산 조망권최상 대지 15,716㎡ 매매가 평당220만원(교한, 조정가)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우수 인근 27홀 골프장 시설 부지 확정
- ★ [토지] 동구 지산유원지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카페거리상권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대지 3,041㎡ 매매가 평당70만원(조정가)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장화리 대지 7,226㎡ 매매가 평당50만원(조정가)
- ★ [토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편백나무숲길 대지 2,720㎡ 매매7억 펜션부지, 전원주택 적합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